

## 일본 총선(12.14) 결과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 CONTENT

## 목 차

### 요 약

---

#### I. 일본 총선 개요

---

- 3 | 선거 실시 개요
- 5 | 총선 결과 요약

#### II. 자민당 주요 공약 및 정책

---

- 6 | 주요 분야별 공약 및 정책 방향
- 10 | 일본경제, 소비세 인상 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엔화 약세는 2015년에도 지속될 전망  
일본경제 당면과제

#### III. 향후 일본 정책 방향과 전망

---

- 11 | 자민당 재집권의 시사점  
경제부문
- 12 | 산업부문
- 13 | 외교부문
- 14 | 한일관계

#### IV. 국내 업계에 대한 시사점

---

- 15 | 성장전략의 과감한 실행 전망
- 16 | 우리기업의 대일본 진출 사업기회

**요 약**

□ 선거 실시 개요

- 선거 배경
  - 아베 총리는 경기부진을 이유로 ‘15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17년 4월로 연기하며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
  - 11월 17일 내각부의 ‘14년 3분기 GDP 속보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선거 쟁점
  - 최대 쟁점은 아베 내각의 아베노믹스 성과
  - 원전 재가동 추진 등 에너지 정책
  - 자민당은 원전 재가동 추진, 야당 대부분은 원전 재가동 반대
  -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 과거 일본 정부는 헌법 제9조(전쟁포기 등)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지만, 아베 내각에서 ‘14년 7월 1일 헌법해석을 변경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각의결정

□ 총선 결과

-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이 전체 475석 중 3분의 2 이상인 326석을 확보, 재집권에 성공
  - 유권자의 관심이 낮았던 선거
  - 해산에서 투표일까지 불과 23일로 짧은 선거 일정
  -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된 최초의 중의원 선거

## □ 향후 일본 정책방향과 전망

- (경제부문) 엔화 약세 및 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GPIF(연금적립금 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의 일본주식 매수 등
- (산업부문) 총선승리로 규제 철폐에 있어서 추진동력을 얻게 됨
  - 다수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실시될 전망
  - 중소기업을 위해 휘발유 등유 등 구입지원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구상을 언급
- (외교부문) 다각적·적극적으로 한국 및 중국과 관계 개선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
- (한일과계) 한일관계개선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
  - 선거공약에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내용 명시

## □ 국내업계에 대한 시사점

- 경제 정책의 변경이나 대폭적인 방향 수정은 없을 듯
- 일본이 아베노믹스의 중장기 과제인 경제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기업들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필요
  - 엔화 약세 및 원화 강세를 활용한 대일 직접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회 모색 필요
  - 자민당은 이번 선거공약에서 ▲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주택 리모델링 ▲건설인프라 및 전자재 ▲MRO 분야 등의 활성화를 언급  
우리기업의 새로운 대일본 진출 사업기회로 활용

I

일본 총선 개요

□ 선거 실시 개요

- 총선 실시 배경
  - 11월 17일 내각부의 2014년 3분기 일본 GDP 속보치 발표 결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자 아베 총리는 2015년 10월의 소비세율 추가 인상(8% → 10%)을 2017년 4월로 연기
  - 이러한 판단에 대해 국민의 신의를 묻는다는 명분으로 의회 해산을 결정함.

아베내각 출범 이후 주요 경제지표 비교

구 분		내각 발족 (2012.12.26)	소비세율 8% 인상 시점 (2013.10.1)	총선 결정 시점 (2014.11.18)
실 물 경 제	실질GDP성장률 (전기대비)	-1.2% (2012. 4/4)	2.4% (2013. 3/4)	-1.6% (2014. 3/4)
	실업률	4.3%(12월)	4%(9월)	3.6%(9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0.2%(12월)	0.7%(9월)	1.0% (9월, 증세분 제외)
금 융 시 장	닛케이평균주가	10,080,12엔 (12.25)	14,484.72엔 (10.1)	17,344.06엔 (11.18)
	엔/달러 환율	84.79(12.25)	97.92(10.1)	116.69(11.18)

\* 자료원 : 한국은행

- 선거 개요
  - 해산일 : 2014년 11월 21일
  - 공시일 : 2014. 12. 2
  - 투개표일 : 2014. 12. 14
  - 의석수 : 475(소선거구 : 295의석, 비례대표 : 180의석)
  - \* 해산 전에는 480석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의석수가 5개 축소

○ 금번 총선의 특징

- 이번 선거 결과가 제 2차 아베 내각의 아베노믹스 성과, 원전 재가동 추진 등 에너지 정책, 지방 활성화 정책, 특정 비밀 보호법 제정,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 등에 대한 평가
- (유권자의 관심이 적었던 선거)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11.24보도)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에 ‘매우 관심이 있다’ 는 21%,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는 의견은 44%였다. ‘관심이 있다’ 는 의견은 합인 65%
- ‘매우 관심이 있다’ 고 답한 사람은 지난 3회(2005년 · 2009년 · 2012년) 중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현저히 낮은 결과
-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이외에도, 이번 선거의 경우 짧은 선거 기간과, 그리고 선거 쟁점이 불명확하다는 점(왜 지금 의회를 해산하는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짧은 선거 기간) 중의원 선거가 12월 2일 공시된 후 본격적으로 12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11월 21일 해산일 부터 투개표일인 12월 14일까지 불과 23일 밖에 되지 않아 이번 선거는 역사상 2번째로 짧은 선거 일정으로 진행
-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 허용) 이번 선거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최초의 중의원 선거
- 2013년 4월 19일 개정 공직 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이후 참의원 및 지방 선거 때 실시된 적이 있으나, 중의원 선거는 이번이 처음임.

□ 총선 결과 요약

-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이 전체 475석 중 3분의 2 이상인 326석을 확보, 재집권에 성공
- 연립여당의 의석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음

주요 정당별 일본 중의원 확보 의석

정 당		선거前 의석수		확보 의석수	
연립여당	자민당	326	295	326	291
	공명당		31		35
민주당		62		73	
유신당		42		41	
공산당		8		21	
차세대당		20		2	
생활당		5		2	
사민당		2		2	
무소속		14		8	
합계		479		475	

\* 주 : 2014년 12월15일 현재, 확보 의석수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수

## II 자민당 주요 정책 방향

### □ 주요 분야별 공약 및 정책 방향

경제정책(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베노믹스 지속추진 통한 경제성장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 디플레이션에 있다고 판단, 脫디플레이션을 위해 ① 금융 완화, ② 재정투입 확대, ③ 성장전략 동시 추진</li> </ul> </li> <li>☞ ‘정권공약집 2014’에서 아베노믹스 성과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자 수 100만 명 증가, 임금 인상률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2.07%), '14년 4월 여행수지 44년 만에 흑자 기록 등</li> </ul> </li> <li>○ 경제회생과 재정재건의 양립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세율 인상, 2017년 4월 실시</li> <li>- 2015년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0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2020년도에는 재정수지 흑자 전환 목표</li> </ul> </li> <li>○ 특히 아베총리는 규제개혁에 역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농업, 노동 분야</li> </ul> </li> </ul>
금융/통화정책 (환율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플레이션 목표(2%)의 조기달성 위한 대담한 금융정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로다 총재, 인플레 목표 2% 달성 위해 모든 수단 동원</li> </ul> </li> </ul>
조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해 소비세 인상시기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4월 인상</li> </ul> </li> <li>○ 경감세율제도 도입 위한 검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세율(10%) 인상에 맞춰 관계사업자 및 국민의 이해를 구한 후 도입. 2017년 도입을 목표로 대상 품목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진행</li> </ul> </li> <li>○ 법인세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투자심리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법인세 개혁 실시, 수년 내 20%(현재 38%)까지 법인세 인하 계획</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성장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완화나 제도개혁 등 공격적 정책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도모</li> <li>○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동적 혁신 환경 추구를 위해 끊임없는 규제개혁 실시. 특히 전력시장 규제폐지를 통한 전력소매 경쟁체제 도입, 농업부문 개혁 및 개방, 고용 부문 암반 규제 개혁 추진</li> </ul> </li> <li>○ 국가전략특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 한해 규정을 완화 외국기업 유치나 개혁거점으로 활용</li> </ul> </li> <li>○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대국을 목표로 중장기 성장자금 공급 확대를 포함하여 벤처 가속화에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강구</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통상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PP 등 통상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력을 통해 지킬 것은 지키고 공격할 것은 공격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길 추구</li> </ul> </li> <li>○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익을 더 중시한 새로운 「ODA 전략」을 작성, ODA를 적극적·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개발 협력 추진</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산업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산업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입국 추진 : 기초연구 결과 개발된 혁신적 기술의 사업화 추진, 산관학 매칭 강화 및 인재교육 강화</li> </ul> </li> <li>○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소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일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을 목표로, 관광자원의 전략적 활용 추진</li> </ul> </li> <li>○ 아시아 최고 금융·자본시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증권 시장 활성화, 자산운용 시장의 강화를 도모하는 등 국제 금융 센터로서 지위 확립</li> </ul> </li> <li>○ 쿨 재팬 전략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주 등 소비재나 문화 콘텐츠 등 “일본의 매력”을 해외 시장 공략 강화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우수한 인프라 산업의 해외 전개 추진</li> </ul> </li> <li>○ 중고주택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가격의 객관화, 주택 리모델링산업 활성화를 통해 중고주택시장을 활성화</li> </ul> </li> <li>○ 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도시권 순환도로, 국제항만의 정비</li> <li>- 하네다·나리타공항의 기능강화</li> <li>- 항공정비·제조산업 확충</li> </ul> </li> </ul>
<p><b>원자력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 있는 에너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책임 있는 에너지 정책 구축</li> <li>- 안정적이면서 저렴한 에너지 수급구조 확립</li> </ul> </li> <li>○ 원자력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확보를 전제로 에너지 수급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li> <li>-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가동 진행</li> <li>- 단, 원자력 발전 의존도는 철저한 에너지 절약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최대한 도입, 화력발전 고효율화를 통해 가능한 최소화 하고자 함.</li> </ul> </li> <li>○ 재생 에너지 사용의 극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력, 바이오 매스 등 지역의 재생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자립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li> <li>- 도시에서도 폐열이나 지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확대</li> </ul> </li> <li>○ 미래 에너지 대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를 원료로 하는 연료전지 도입과 수소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등 미래 에너지 대안 마련</li> </ul> </li> <li>○ 에너지 절약대책의 근본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관리 시스템 활용 등 현명한 에너지 소비 촉진</li> <li>- 에너지 절감산업 지원</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격적 지구온난화 외교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탄소배출 목표 초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2015년 합의 예정인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확립에 기여</li> <li>- 동시에 일본의 최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사회 보급 확대</li> </ul> </li> <li>○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중 화학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명</li> <li>- 인근 국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등 공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정치외교 (영토문제 포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고한 방위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 동맹 강화 추진하는 동시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과 방위협력 추진</li> </ul> </li> <li>○ 전략적 외교 적극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호주, ASEAN, 인도 등과 협력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한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도모</li> </ul> </li> <li>○ 허위에 근거한 비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명예와 신뢰, 국익 회복을 위해 행동</li> </ul> </li> <li>○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법의 지배” 등 공통의 가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관계 각국과 연계</li> </ul> </li> <li>○ 외국 선박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주권과 영토·영해를 지키기 위하여 센카쿠 열도 주변해역 외국 선박에 대해 대응</li> <li>- 외국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 강화</li> <li>- 중국 어선의 산호 밀렵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와 조치를 취함.</li> </ul> </li> <li>○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국민의 생명, 재산,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기 위해 신 방위전략(防衛大綱) 수립,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강화</li> </ul> </li> </ul>

## □ 일본경제, 소비세 인상 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일본정부의 '14 GDP 성장률 전망치 1.2%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
  - 경제성장률 : ('13년)2.1%→('14.1Q)5.8%→('14.2Q)△6.7%→('14.3Q)△1.9%
  - 일본은행, '14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 1.0%(114.7) → 0.5%(114.10)

### <참고> 2015년 일본 경제전망치

- 일본은행 : 1.5%('14.10)
- IMF : 0.8%('14.10) \* 7월 전망치 1.0%에서 하향 조정
- OECD : 0.8%('14.11) \* 9월 전망치 1.1%에서 하향 조정
- 일본 민간 연구기관 : 평균 1.6%('14.11)

## □ 엔화 약세는 2015년에도 지속될 전망

-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발표('14.10.31) 후 엔저 가속
  - \* 엔/달러: 83.3엔('12.12.16)→105.4엔('13.12.30)→109.85엔('14.10.1)→121.46엔('14.12.05)

### <참고> 2015년 엔/달러 환율 전망

- 일본 기관 달러당 110엔 후반대 : 미즈호 은행(119엔), 다이와 총연(118엔) 등
- 일부 해외기관, 달러당 140엔까지 전망 :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 등

- 주요 엔화약세 요인
  - 일본경제 부진 ↔ 미국경제 호조
  - 일본은행 금융완화 확대 가능성
    - \* 구로다 총재, 인플레이 목표 2% 달성까지 모든 수단 동원)
  - 2011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 지속

## □ 일본경제 당면과제

- 소비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회복에 차질
  - 소비세 인상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로 소비 지속적 확대에 한계
    - \* 10월 소비지출 4.0% 감소, 7개월 연속 마이너스
    - \* '14년 임금상승률은 2.07%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소비세 인상 및 수입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감소
- 엔화약세에도 계속되는 무역적자 행진
  - 2011년 무역적자 전환 이후 28개월 연속 적자
    - \* 연간 추이(억달러) : 756('10)→ △323('11)→ △872('12)→ △1,197('13)→ △1,085('14.1-10)

## III

## 향후 일본 정책 방향과 전망

## □ 자민당 재집권의 시사점

-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임으로 해석되어 엔화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임.
- 자민·공명 연합여당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치·경제 전반에 큰 동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 경제부문

- 엔화 약세·주가 상승이 더욱 진행될 가능성 높아져
  -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GPIF<sup>1)</sup>의 일본 주식 및 외국인 채권 투자 이외에도, 내년 봄 통일 지방 선거를 노린 대형 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화 약세 및 주가 상승은 지속될 것임.
- 닛케이 주가 상승 예상
  - 다이와 증권이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 의석(280~299)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말에 1만 9090엔까지 상승하고, 이후 2015년 3월 말에는 1만 9600엔까지 그 후 12월 말에는 2만 1730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음.
  - ①엔화 약세 기조,
    - ②일본은행과 GPIF에 의한 주식 매수에 따른 수급 개선,
    - ③소비세율 재인상 연기에 따라 증시 상승 기조가 전망됨.

1) GPIF: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퇴직연금·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독립행정법인. 후생노동성 산하법인. 연금자금운용기금을 발전시켜 2006년에 설립. 운용방침의 책정 등을 행하고, 실제 운용 업무는 신탁은행이나 투자고문회의에 위탁. 자금을 국내외의 채무·주식에 배분해 포트폴리오 운용을 실행

## □ 산업부문

- ‘성장전략’ 추진 가속
  -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JP 모건 증권)는 비판적인 평가가 있었음.
  - 이른바 ‘암반(덩어리) 규제’ 철폐에 있어서 의료, 농업 분야 기득권의 저항으로 인해, 적극적인 추진이 용이하지 않았음.
  - 특히, 농업의 경우 TPP, FTA 등 자유무역협상 추진에 대한 반발과 JA(전국농업공동조합 중앙회) 개혁에 대한 저항 등이 상당했음.
  - 이런 이유로 이번 선거의 승리로 자민당은 규제 개혁 등에 대한 추진력 확보가 가능해짐.
  - “여당이 승리하면 성장전략 추진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라쿠텐 증권)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법인 감세와 규제 완화는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과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임.
-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실시 전망
  - “지방에 많은 중소기업은 엔화 약세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방 경제 활성화’에 있어 급격한 엔화 약세는 부정적 요소”라며 대규모 금융완화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음.
  -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주가 상승의 혜택을 수출형 대기업과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까지 파급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도 가두연설에서 “중소기업이 엔화 약세로 힘든 것은 확실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음.
  - 휘발유, 등유 구입 지원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대한 구상을 언급하고 있어,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다수의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 ○ 원전 재가동에 따른 문제

- 자민당의 공약에는 “원자력은 안전성 확인을 전제로 한 중요 ‘베이스로드 전원’으로 활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금년 여름 실시한 ‘경제산업성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 기본 정책 분과회’에서 향후 발전 방법에 대한 이른바 ‘최적 전원 구성(베스트 믹스)’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 결정시기는 2015년 봄 이후가 될 전망이다.
- 최근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화력 발전 비용의 감소가 기대되지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원전 재가동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는 변함없기 때문에 선거 이후 원전 재가동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외교부문

## ○ 다각적·적극적으로 한국, 중국과 관계 개선 추진

- 아베 정권은 그동안 미국, ASEAN, 호주, 인도, 러시아, 터키 등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외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일본의 발언력을 높여왔음.
- 일본은 현재 중국·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계 개선에 대한 결의가 강한 상태
- 따라서 앞으로도 지금 이상으로 다각적·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중국·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

## ○ 우경화 위험

-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함으로써 일본의 우경화가 우려됨.
- 총 의석수 475의 3분의 2 이상은 317석으로, 아베 총리가 의욕을 나타내는 헌법 개정의 발의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개정도 가능해질 수 있음. 단, 공명당과는 선거공약에서 개헌(改憲)이 아닌 가헌(加憲)을 명시하고 있어 단기간의 개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한일관계

- 한국과 관계 개선 노력 지속
  - 2013년 12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문제로 한국과의 외교 관계 냉각이 계속되어 왔음.
  -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아베 정권이 해결해야할 중요 외교 과제의 하나로, 아베 총리는 외무장관 회담 개최를 한중일 정상회의로 연결하고자 함.
  - 이번 선거의 공약에 “한국·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아베 정권은 선거 후에도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IV 국내 업계에 대한 시사점

### □ 성장전략의 과감한 실행 전망

- 경제 정책의 변경이나 대폭적인 방향 수정은 없을 듯
  -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안정된 정권 기반과 여론의 신임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성장전략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면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소기업 지원, TPP·FTA 등 다자간 무역 협상, 외자 유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수용 등을 수단으로 디플레이션 탈피·경제 재건을 통한 성장 궤도에 올라가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엔화 약세 추세는 지속될 듯
  - 일본,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금융 정책을 감안했을 때 일본의 엔화 약세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수용 등 올해 선거를 기점으로 단기간 내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화 강세를 활용한 대일 직접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기업의 대일투자현황

(단위: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0	539	195	417,244	585	337,096
2011	446	146	419,012	488	266,168
2012	584	176	730,499	636	475,790
2013	608	193	911,748	677	708,498

\* 주: 지점, 지사, 법인 모두 포함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기업의 대일투자업종

(단위: 건, 개, 천 달러)

업종 분류	신고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1,457	750	1,540,468	1,501	1,321,662
제조업	1,726	621	1,343,021	1,843	1,096,7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656	240	755,818	667	599,65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84	255	1,145,767	923	1,022,44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85	98	513,227	452	379,854
숙박 및 음식점업	275	166	134,493	308	116,188
합계	4,728	2,269	5,796,190	5,059	4,728,302

\* 주: 지점, 지사, 법인 모두 포함, 1968년~2013년 12월 기준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 우리기업의 대일본 진출 사업기회

- 자민당은 이번 선거공약에서 ▲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주택 리모델링 ▲건설인프라 및 전자재 ▲MRO 분야 등의 활성화를 언급  
우리기업의 새로운 대일본 진출 사업기회로 활용
- (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고효율·고출력 태양광 모듈, 인버터, 파워컨디셔너, 축전지는 지속적으로 수요증가가 예상
  - \* 에너지절감 관련시장 전망 : 2011년 2조 7,872억 엔 → 2020년 5조 822억 엔
- 에너지전략 차원에서 해양 자원과 관련된 산업이나 에너지 수송을 위한 해운 및 조선산업도 활성화 예상
- (주택 리모델링) 중고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리모델링산업을 촉진될 전망
  - \* 주택 리모델링 시장 : 2013년 6.9조 엔
- 특히 친환경 소재의 단열재 및 내·외장재 등의 시장 확대 전망
  - \* 스마트하우스 시장 규모는 2020년에 3.64조 엔에 달할 전망 스마트하우스 주요설비 시장 규모는 2020년에 1조 2,806조 엔 전망

- (건설인프라 및 전자재) 자연재해에 대비해 노후화된 인프라 대책이 강하게 실시될 전망
-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와 함께 전자재 및 건설기계의 수요 예상
  - \* 도쿄올림픽 인프라 건설 3,800억 엔 규모
  - 일본 전자재 수입액(백만달러) : 6,091(2011년) → 6,095(2012년) → 6,156(2013년)
- (MRO 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3대 도시권(수도권·킨키권·나고야권) 순환도로와 국제항만의 정비, 하네다/나리타공항의 기능강화와 함께 MRO(Maintenance·Repair·Overhaul)산업도 촉진될 전망
  - \* 일본정부에서는 자국내 MRO 산업을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



### 작성자

- |          |        |
|----------|--------|
| ◆ 도쿄무역관  | 박은희 과장 |
| ◆ 오사카무역관 | 조은진 과장 |
| ◆ 선진시장팀  | 김광수 차장 |



## Global Market Report 14-048

### 일본 총선(12.14) 결과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4년 12월 18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http://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